

CAMSS (Coalition Against Sexual Slavery by Japan) 캠스 (미서부 정신대 대책 협의회)

성명서

우리는 이땅의 정의와 평화를 존중하는 양심세력으로서, 일본국가권력이 집단적으로 10만 - 20만의 한국여성들을 일본군인의 성적노예로 징집, 착취, 학살한, 천인공로할 인류에 대한 죄악을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일본패전후 5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는 정신대 만행에 대한 공식적인 시인 사죄 및 배상을 위한 진상규명에 대한 진지하고 긍정적인 해결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식민지 지배의 전후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뉘우침의 표시가 없었다.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와 일본의 양심세력의 연대노력 결과로, 정신대 만행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과 관련문서의 발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제 2 차 세계 대전 기간 한국여성들을 일본군대의 위안부로서 성적폭행을 직접관리해온 주범이 바로 일본 정부와 그 핵심인 일왕의 황궁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일본정부는 92년 1월 정신대 만행에 대한 관여를 마지못해 겨우 시인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는 사과는, 작금의 고조된 한국국민과 전세계 인권위의 분노와 해결의지를 무마하려는 기만이며 시대착오임을 엄중 경고하면서, 우리는, 만행 전모의 규명과 실질적 배상이 시행되지 않는 어떤 사과도 인정하지 않을것임을 밝힌다.

- 첫째, 일본정부는 정신대 만행 전모를 공개하고, 양심적인 진상규명을 통한 도의적인 사죄를, 각각 피해당사자 및 유가족들 (남/북한, 타 아시안국가들) 모두에 한다.
- 둘째, 일본정부와 양 남북한 정부, 그리고 세계 인권 단체 운동협들은, 또다시 이땅에 이와 같은 역사적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폭력의 세계사 전례를 청산할수 있도록, 연대를 이루어 정보를 교환하고 정신대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것이다.
- 셋째, 일본정부는 본격적인 조사위원회 설치와 함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정확한 정신대 피해상황을 접수, 피해배상요구에 적극 대처할것이며, 역사 교과서 및 참고서를 통한 일본의 군국주의적 식민정책 만행의 집약 이라 할수있는 정신대문제 해결을 비롯한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넷째, 유엔 인권위원회와 여성 및 소수민족 위원회는 자주적이고 평등한 인류의 미래지향적 의지를 받아들여, 일본정부의 모든 정신대 관련자료의 공개와 배상의 수준, 그리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다섯째,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하며, 강력한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한국 일본 미국교포 단체,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피해국 까지도, 더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세력 모두 합세하여 일본정부의 조속한 사과 및 배상시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